

서울시의 관찬은 일자리에 관한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의 관찮은 일자리에 관한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요약	3
I.	관찮은 일자리의 개념	4
II.	서울시 관찮은 일자리의 실태분석	6
III.	향후 정책방향	13

김범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76
kbs@si.re.kr

21세기 들어 고용문제의 관심이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보수만을 기준으로 한 일원적 관점은 일자리와 보수 외에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모두 만족하는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서울이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에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일자리 중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가 아직 35%대에 불과하고, 고용의 질 지수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일자리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서울의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약 161만 명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5.3% 증가

서울의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2008년 1,245,098명에서 2013년 1,613,698명으로 연평균 5.3%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1%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편이다. 2013년 전국의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서울(35.1%), 경기(20.6%), 경남(5.3%), 부산(4.8%), 인천(4.5%)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울의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주로 30~40대, 남성, 대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별로는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에, 직업별로는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최근 다소 정체된 상태

일자리 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13년 70.1로 전국 평균(68.6) 수준을 1.5p 상회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원적 관점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일자리 질의 강도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강화

서울의 관점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면적 측면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관점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셋째,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관점은 일자리의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정책대상별로 관점은 일자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 관참은 일자리의 개념

고용문제의 관심이 고용의 ‘양’에서 ‘질’로 이동

21세기 들어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 21세기 들어 ILO, 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
 - 취업자 확대나 고용률 제고 등 주로 양적 문제에 집중되었던 노동 분야의 문제의식이 고용의 적정 보수와 안정성 확대, 근로환경 개선 등 고용의 질적 측면으로 확장
- 최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와 노동계층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이 고용조건의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배가
 - 고용조건의 악화는 여성, 고령층, 청년층 등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요구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역할 제고 측면에서도 고용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
- 일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사업 및 개인 수요에 알맞은 일자리 구성’을 의미
 - 일자리뿐 아니라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된 객관적 특성, 근로자 특성,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의 특성 간 조화, 고용의 특징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일자리 만족) 등을 포함
 - 초기에는 보수 위주의 경제적 관점 등 단면적 측면에서 보다가 점차 보수, 직업에 대한 평판, 직무만족도 등 다면적 측면에서 본 개념으로 발전

관참은 일자리는 기준에 따라 이원화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

-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가장 기본적인 보수만을 만족하는 일자리

- 한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기준에는 못 미치는 일자리를 ‘잠재적 관찮은 일자리’로 정의해 보조적으로 파악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보수 외에 다면적으로 평가

-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만족하는 일자리
- 특히 이러한 지표 각각에 대해 일정 수준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

관찮은 일자리의 조건은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설정

- 관찮은 일자리 조건은 학력, 연령, 업종, 직종 등 대상별로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보수, 고용안정성, 적정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측정
- 보수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이며, 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인 일자리 등

표 1 관찮은 일자리 측정변수와 조건

구분	측정기준	측정기준별 특징
보수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이상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이상 비중이 53.4%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9시간 이하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적정 근로시간 비중이 71.2%
고용안정성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63.8%
직업의 사회적 평판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의 표준화 값이 0 이상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 평균 이상이 49.2%

주 : 2013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II. 서울시 관청은 일자리의 실태분석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집적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의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2,761,551명

- 서울의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2008년 2,320,585명에서 2013년 2,761,551명으로 연평균 3.5% 증가
- 2013년 전국의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28.8%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은 경기(21.9%), 경남(6.5%), 부산(5.2%) 등의 순으로 서울에 가장 많이 집적
- 특히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5.7%가 분포
- 서울의 일원적 관청은 일자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29%대를 유지했으나, 2012년에 28%대로 축소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확대
- 한편, 2013년 서울의 잠재적 관청은 일자리는 1,067,228명이며, 전국 내 비중도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전국 내 잠재적 관청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22.7%), 경기(22.6%), 부산(6.7%), 인천(6.2%), 경남(5.7%)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도시가 관청은 일자리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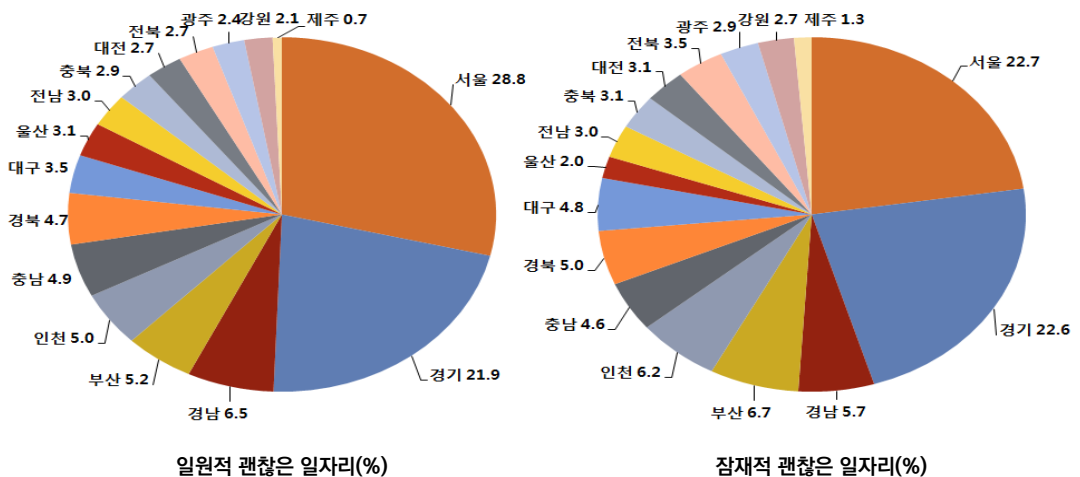


그림 1 2013년 일원적·잠재적 관청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2013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일원적 관측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

- 2013년 서울의 일원적 관측은 일자리 중 제1의 산업은 전문서비스업이며 2008년 이후 전문서비스업, 출판업 등에서 일자리 수가 크게 확대
- 2013년 중분류 비중 상위 5대 산업은 전문서비스업(8.2%), 도매 및 상품중개업(8.0%), 교육서비스업(7.3%), 출판업(6.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5%)
- 2008~2013년 중 주요 산업별 일원적 관측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서비스업 13.8%, 출판업 10.3%, 사업지원서비스업 10.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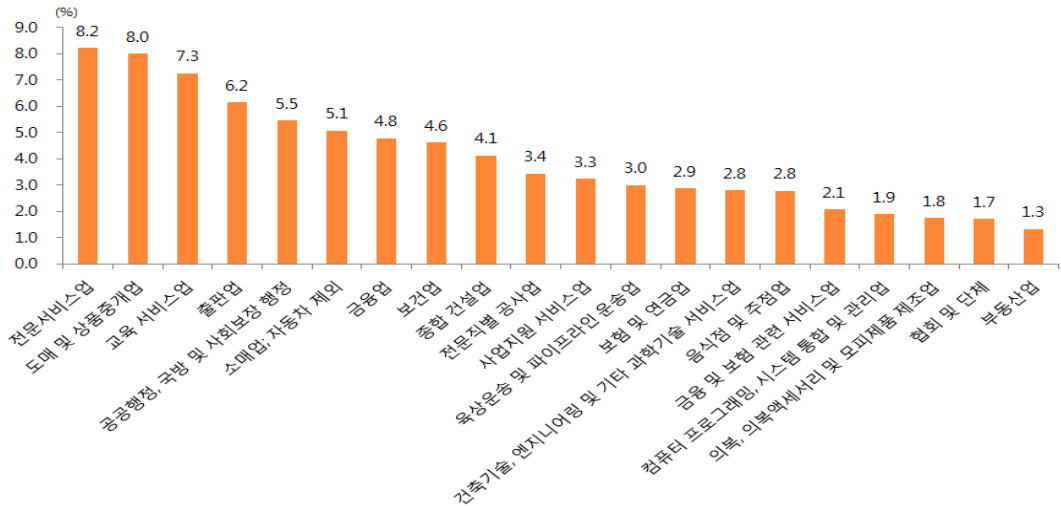


그림 2 2013년 서울시 일원적 관측은 일자리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상위 20대 산업)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2013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 한편,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는 주로 소매업 등 상위 5대 산업에 43.7%가 분포해있으나, 2008년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수 증가가 매우 큰 편
- 2013년 중분류 비중 기준의 상위 5대 산업은 소매업(11.7%), 음식점 및 주점업(10.5%), 사업지원서비스업(9.8%), 교육서비스업(6.0%), 도매 및 상품중개업(5.6%)
- 2008~2013년 중 주요 산업별 잠재적 관측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업지원서비스업 0.5%, 소매업 -6.8%, 음식점 및 주점업 -8.4% 등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2008년 이후 연평균 5.3% 증가

2013년 기준으로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1,613,698명

- 서울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2008년 1,245,098명에서 2013년 1,613,698명으로 연평균 5.3% 증가
- 2013년 전국의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서울(35.1%), 경기(20.6%), 경남(5.3%), 부산(4.8%), 인천(4.5%) 등의 순으로 분포
- 특히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감안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서울 집중도는 임금 기준인 일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준을 상회
-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서울 비중은 일원적 기준의 일자리 비중(28.8%)을 6.3%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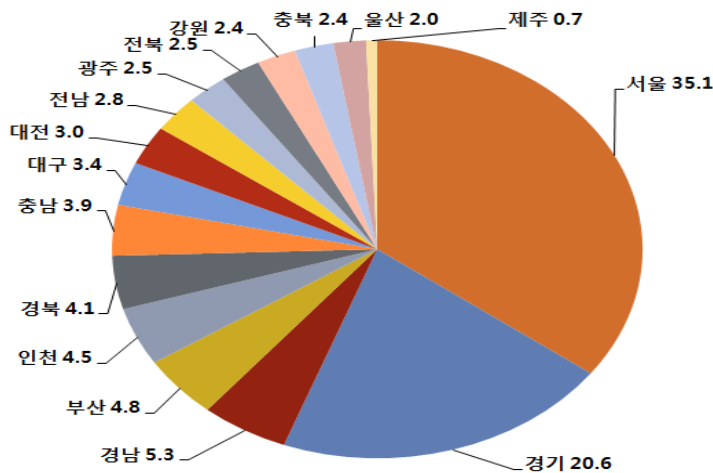


그림 3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시·도별 분포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 통계청

주 : 2013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 2013년 기준으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각 시·도 내 비중도 서울이 35.1%로 가장 큰 편

- 2013년 각 시·도 내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비중은 서울(35.1%), 대전(26.7%), 광주(24.7%), 경기(24.0%), 강원(23.8%) 등의 순

서울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국의 평균 수준을 웃도는 도시

- 다원적 관찮은 일자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모든 구성요소에서 전국의 평균 수준을 웃돌고, 직업의 사회적 평판,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의 순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우세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0.1%로 전국 평균(53.4%) 수준을 6.7%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65.2%로 전국 평균(63.8%)을 1.4%p 상회
- 2013년 서울의 일자리 중 적정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일자리는 71.3%로 전국 평균(71.2%) 수준을 0.1%p 상회
- 2013년 직업의 사회적 평판을 충족하는 서울시 일자리는 62.5%로 전국 평균(49.2%) 수준을 13.3%p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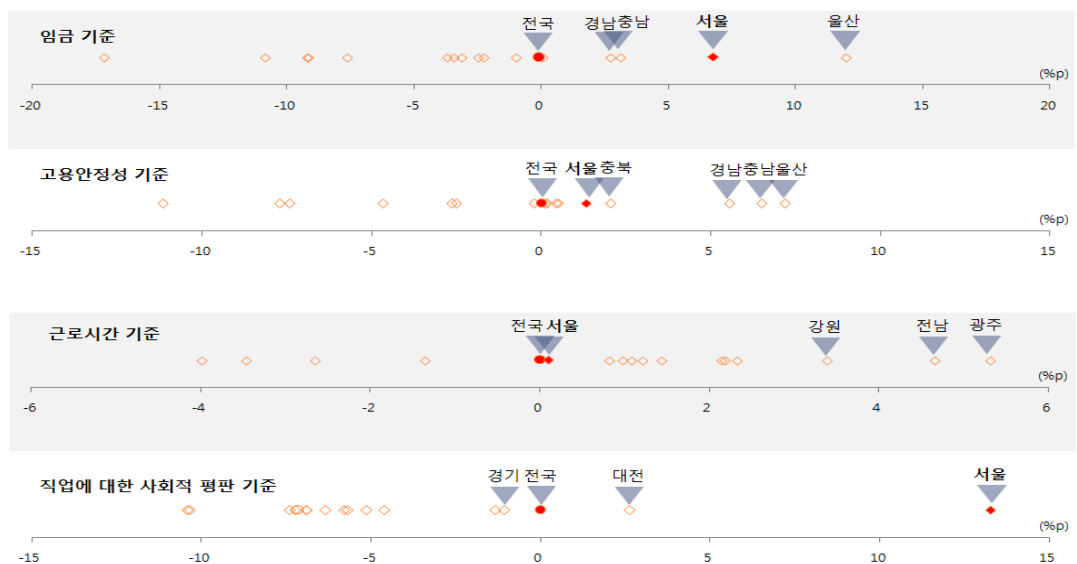


그림 4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의 구성요인별 시·도 내 비중과 전국 평균 간 편차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주로 30~40대, 남성, 대졸 이상이 차지

-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주로 30~40대 근로자가 차지
 - 2013년 서울의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령별 구성은 30대 40.1%, 40대 27.3%, 20대 이하 17.5%, 50대 13.2%, 60대 이상 1.9% 등의 순
- 성별로는 남성이 63.9%를 차지하고, 여성은 36.1%를 점유하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 증가세가 큰 편
 - 2013년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 중 여성의 일자리 비중은 2008년 대비 2.4%p 확대(남성의 일자리 비중은 2.4%p 축소)
 - 2008~2013년 중 성별로 본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6.7%로 남성(4.6%)을 상회
- 학력별로 보면,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
 - 2013년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학력별 구성은 대졸 이상 90.5%, 고졸 9.4%, 중졸 0.2%, 초졸 이하 0.0%
 -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일원적 관참은 일자리에 비해 대졸 이상 비중이 9.9%p 높고, 고졸 비중은 10.0%p 하회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포진

- 2013년 서울에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는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에 많이 포진
 -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산업별 비중은 전문서비스업(10.7%), 도매 및 상품중개업(9.0%), 교육서비스업(8.7%), 출판업(7.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8%) 등
 - 2008~2013년 중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주요 산업별 연평균 증가율은 전문서비스업 15.9%, 출판업 13.7%, 사업지원서비스업 12.1% 등
- 한편, 중분류 직업별로 보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가장 많이 분포

-
- 2013년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의 중분류 직업별 비중은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35.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8.5%), 경영·금융 전문가 관련직(8.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6.9%) 등의 순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이후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

- 일자리 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13년 70.1로서 전국 평균(68.6) 수준을 1.5p 상회
- 일자리 질 지수는 2008년 67.0에서 2009년 70.9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소폭 하락
-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는 2008~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하고, 전국은 연평균 1.0% 증가
- 2008년 이후 서울의 일자리 질 지수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수를 비교하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최근 들어 다소 차별화
- 2011년 이후 서울시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일자리 질 지수는 소폭 하락한 후 정체
-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지수가 동행하지 않는 것은 다원적 관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의 중요도 차이에 따라 일자리 질의 강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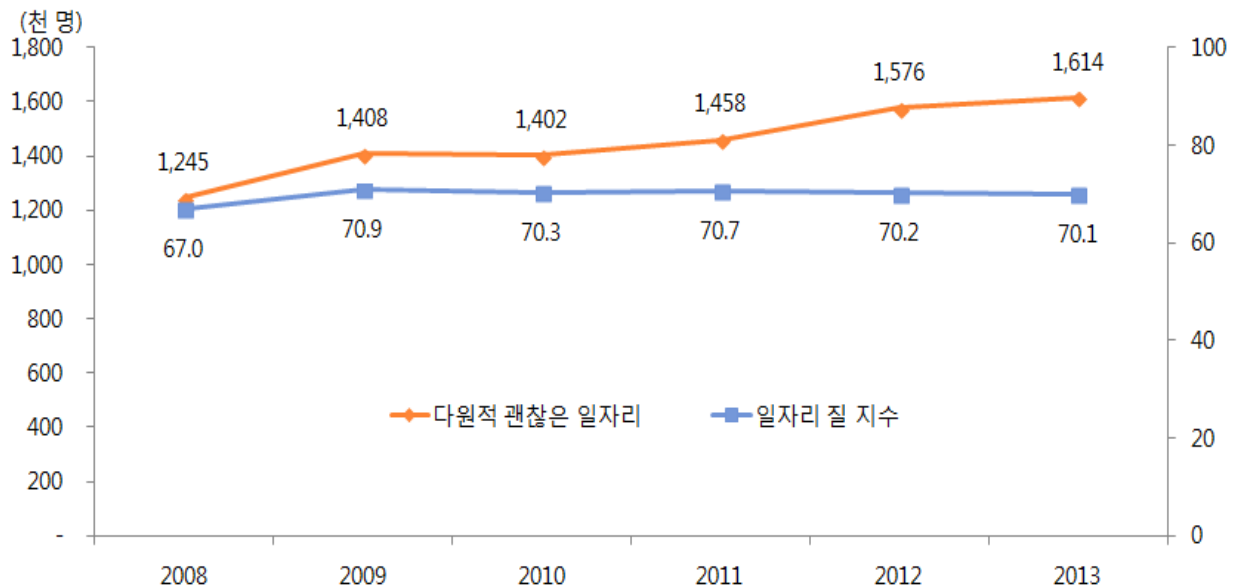


그림 5 2008~2013년 중 서울시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와 일자리 질 지수의 추이

일자리 질 지수의 작성 목적과 방법

- 일자리 질 지수의 작성 목적
 - 관참은 일자리 수의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관참은 일자리의 총량 변화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각 구성요인의 중요도 및 수준 차이를 무시한 방식으로 일종의 무가중치 방식과 유사한 접근법
 - 만일 근로자들이 관참은 일자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 보수, 고용안정성 등 구성요인별로 중요도를 달리하고, 수준 차이가 크다면 이를 반영해 일자리 질의 강도를 파악할 필요
- 일자리 질 지수의 작성 방법
 - 구성변수는 다원적 관참은 일자리의 구성요인과 동일하게 설정한 후 지표 간 측정 단위를 조정
 - 임금은 월평균 임금이며, 측정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월평균 임금에 자연대수를 취한 후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
 - 고용안정성은 상용직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상용직은 1, 계약직 및 임시직은 0의 값을 부여
 -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49시간 이하에 1을, 그 외는 0의 값을 부여
 -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판은 직업 중분류 기준 사회·경제적 위세 점수를 사용하였고, 이를 0에서 1의 범위로 표준화
 - 일자리 질을 구성하는 측정 변수 간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는 임금(W) 0.298, 고용안정성(S) 0.345, 근로시간(H) 0.144, 사회보험 유무(I) 0.140, 사회적 평판(J) 0.072
 - 일자리 질 지수(QEI) 산출을 위한 최종 합성지수 식은 다음과 같음
 - $QEI_{ti} = 14.03 + 29.85 W_{ti} + 34.47 S_{ti} + 14.45 H_{ti} + 7.20 J_{ti}$

III. 향후 정책방향

고용의 질이 수반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수립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

- 서울의 괜찮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수반된 양적 확대를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
- 첫째, 보수,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을 향상
- 둘째, 유망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셋째, 청년층, 노년층, 여성, 장애인 등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마련

주요 추진 전략

주요 과제	추진 전략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 질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산점 확대- 두루누리 사업의 서울시 협약을 통해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로 서울 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괜찮은 일자리 창출 산업과 서울시 산업전략의 연계-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전달체계 개선- 괜찮은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
정책대상 선정과 실무적 가이드라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로 정책대상 설정-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 정립

다면적 측면에서 일자리의 질 향상

서울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적극 추진

- 공공부문에서 먼저 생활임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에 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고용안정성의 제고는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발점

- 공공부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정규직 전환대상을 확대
-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에서 정규직 비율에 따른 가산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 등 해고회피 노력 기업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두루누리 사업’의 서울시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

-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홍보 부족과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사업의 실효성이 저하
- 자치구별 플랫폼 설치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 소규모 사업장의 발굴 기회를 확대
- 사업장 관련 각종 인·허가 시 시청 및 구청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두루누리 사업을 안내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
-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의 우대 및 우선 배정, 경영컨설팅 제공,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 설치 등 안전지원 인센티브를 부여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유지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

- 우선적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유망산업 및 성장산업을 서울시 산업전략과 연계하여 적극 육성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및 권역별 육성 전략과의 연계 등을 강화
- 특히 제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업 육성과 소프트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육성과 전달체계를 개선

-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현재는 저임금 속에 고용안정성도 낮은 편
- 시장의 개입 없이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
 -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생태계 구축에 주력
- 공공사회서비스는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성과계약제 도입으로 운영방식을 개선
 - 사전에 보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정밀한 위탁설계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취업유지 등 사후 위탁관리를 강화

괜찮은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뒷받침하는 인력양성프로그램을 강화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설계 시 서울시 산업 및 직업 변화 등을 고려한 인력양성 및 전업·전직 프로그램을 강화

- 미국 등 고용서비스 선진국에서 확대 추세인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기팅(targeting)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능력을 제고
- 개인 프로파일 기반 타기팅(targeting) 서비스는 개인별 고용이력을 취합해 노동시장 이행과정별로 경력개발 단계를 분석해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괜찮은 일자리의 대줄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졸 인력의 진입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공공부문이 적극 활용하거나 우수기업과의 연계를 확대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가 우선 후보군

-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와 잠재적 괜찮은 일자리는 정책적 노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편
- 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 중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해당 일자리의 다른 기준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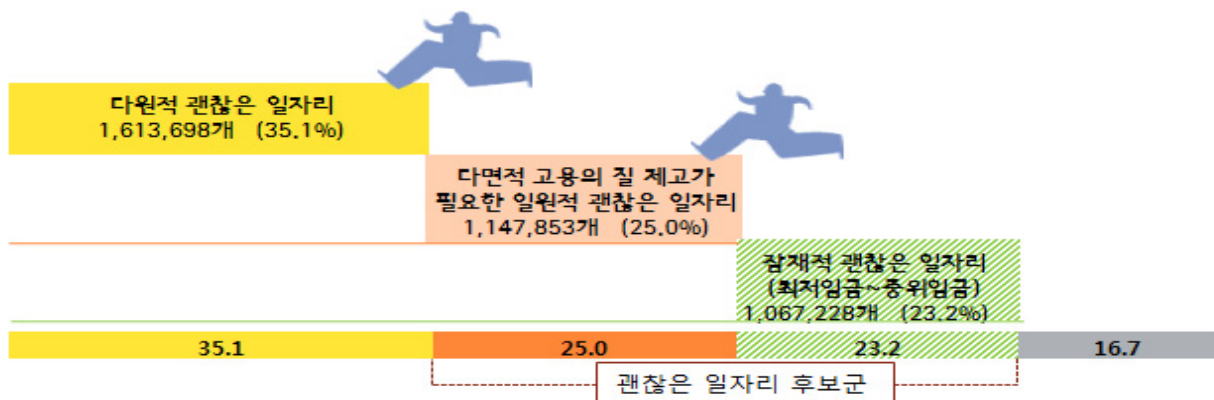


그림 6 2013년 기준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후보군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13년, 통계청

주 : 2013년 수치는 상반기 기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수립

- 사업특성에 따라 대상 일자리를 어떻게 더 나은 일자리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정립
 - 정책대상의 일자리 질 개선은 동시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정책대상 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의 계획 수립 및 정책목표 설정이 용이
 - 정책대상별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은 구인 및 구직 시 정보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사업체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자극제 역할도 가능